

2015년 남북관계 현안과 3/4분기 평화지수 결과

홍 순 직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남북관계 현안 설문조사

8.25 남북고위급 합의 이후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4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92.4%)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0명중 6~7명(65.3%)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자는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3.4%가 '先재개, 後보완' 또는 '3대 과제만 해결되면 재개'해야 하며,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90.9%)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에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59.0%)이 다소 많았으며, 전문가 10명중 8~9명(86.1%)은 금강산관광 재개가 여의치 않으면 개성관광이라도 먼저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남북 당국회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담의 의제로 '중단된 남북경협 복원' 등 경제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자고 주문했다. 부문별로는 '경제'(46.5%)가 가장 많았고 '정치'(27.8%), '사회 문화'(25.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2015년 3/4분기 결과와 시사점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4분기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9.7p나 상승한 47.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회복했다. 4/4분기 기대지수 역시 전기 대비 17.8p나 상승한 53.1을 기록하여 3분기만에 긍정적으로 반전되었다.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지수는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는 급등한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하락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으며, 보수 성향의 평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남북 차관급회담의 개최로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산가족 상봉은 고령화의 심화로 생애 시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와 효과 등을 재인식하여 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이후난(先易後難)과 구동존이(求同存異) 원칙으로 남북 당국회담에서는 경제 현안 등 성과 도출이 쉬운 부문을 우선 의제로 논의한 후,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남북 당국회담 전망 등에 대해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 방향과 전망

먼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 10명중 9명 이상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해야 한다' 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의 절대 다수(93.1%)가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재개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응답률은 2013년 결과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 (6.3%)와 '재개 필요 없음' (0.7%)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함과 절실함을 드러냈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의 행사이며, 고령화로 인해 생애 상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이 보수 성향보다 '정치 상황과 분리 추진' 할 것을 더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방향	2013.11	2015. 11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	92.4%	93.1%	81.8%	94.1%	100.0%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	6.7%	6.3%	15.2%	5.9%	0.0%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필요 없음	1.0%	0.7%	3.0%	0.0%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2013. 11.

이산가족 상봉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현 정부 임기 내의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면 상봉'을 제외한 여러 방식의 상봉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부문별로는 '대면 상봉'은 긍정적 응답(59.1%)이 다소 우세했으나 '대면 상봉의 정례화' (19.5%)를 비롯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전면적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32.0%) 등도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지난 10월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10. 20~26) 이후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은 물론, 남북 당국회담이

우리 정부의 3차례 제의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전면적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68.0%), ‘상봉의 정례화’ (80.6%)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였다.

현 정부 임기내 상봉 가능성 진단	매우많다	대체로많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전면적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4.9%	27.1%	60.4%	7.6%
서신 교환	2.8%	31.3%	56.3%	9.7%
화상 상봉	2.1%	38.9%	50.7%	8.3%
대면 상봉	4.2%	54.9%	38.2%	2.8%
대면 상봉의 정례화	1.4%	18.1%	61.8%	18.8%

금강산관광 재개의 추진 방향과 전망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을 연계하자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 10명중 6~7명 (65.3%)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는 북측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등의 경험 사업과 연계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자는 의미로, 상봉의 절실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성향별로는 중도(67.7%)와 진보(67.4%)가 보수(57.6%)보다 연계 주장에 대해 다소 강한 입장을 표시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재개 연계안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매우 공감한다	29.9%	21.2%	22.1%	48.8%
다소 공감한다	35.4%	36.4%	45.6%	18.6%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25.7%	33.3%	22.1%	25.6%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9.0%	9.1%	10.3%	7.0%

금강산관광 재개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강산관광을 ‘先재개 後보완’ 또는 ‘3대 선결과제만 해결되면 재개’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¹⁾ 전문가 10명 중 8명 이상(83.4%)이 일단 무조건 재개한 후 해결 과제를 보완해나가거나 3대 선결과제가 해결되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예, 결국 ‘조속한 관광 재개’ 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95.3%)가 보수(60.6%)

1) 정부의 금강산관광 재개 3대 선결과제는 진상 규명, 재발 방지와 신변안정 보장 대책 마련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면담(2009. 8)에서 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 등을 구두로 약속한 바 있음

보다 적극적인 관광 재개를 주장하였다.

금강산관광 재개 방향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먼저 재개 후 해결과제 보완	42.4%	21.2%	42.6%	58.1%
3대 선결과제만 해결되면 관광 재개	41.0%	39.4%	44.1%	37.2%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관광 재개	6.9%	9.1%	7.4%	4.7%
북한 사과, 핵문제 등 남북현안 모두 고려	9.7%	30.3%	5.9%	0.0%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의 대부분(96.5%)이 금강산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정적 응답자는 전무하였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남북관계 영향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매우 긍정적 영향	49.3%	33.3%	47.1%	65.1%
다소 긍정적 영향	47.2%	57.6%	51.5%	32.6%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함	3.5%	9.1%	1.5%	2.3%
다소 부정적 영향	0.0%	0.0%	0.0%	0.0%
매우 부정적 영향	0.0%	0.0%	0.0%	0.0%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에 대한 평가에서는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금강산관광은 ‘통상적인 단순 관광 상품’이 아니라 ‘남북 상호 이해의 창구 및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금강산관광이 ‘단순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전문가 응답률은 극소수(6.9%)에 불과하며, 그 이상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100.0%)가 보수(93.1%)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	2014. 3	2015. 11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통상적인 단순 관광 상품에 불과	8.0%	6.9%	18.2%	5.9%	0.0%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의 창구	30.6%	43.1%	51.5%	45.6%	32.6%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상징	61.4%	50.0%	30.3%	48.5%	67.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2014. 3.

한편,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경우 방문할 의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방문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문가의 절대 다수(93.1%)가 ‘방문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2014년 3월의 조사결과(89.8%)보다 방문하겠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아진 것이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이 모두 방문하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적극적이었다.

금강산관광 재개시 방문 의향	2014. 3	2015. 11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매우 많다	89.8%	66.0%	39.4%	66.2%	86.0%
다소 있다		27.1%	39.4%	29.4%	14.0%
별로 없다	10.2%	4.2%	12.1%	2.9%	0.0%
전혀 없다		2.8%	9.1%	1.5%	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전계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적 응답(59.0%)이 긍정적 응답(41.0%)보다 다소 많았다. 전문가들은 재개 가능성에 대해 ‘다소 낮은 편’(47.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이에 못지않게 ‘다소 높은 편’(36.8%)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는 응답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정치 성향별로는 부정적 응답에 대해 보수(60.6%)와 진보(60.4%)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전망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매우 높은 편	4.2%	0.0%	5.9%	4.7%
다소 높은 편	36.8%	39.4%	36.8%	34.9%
다소 낮은 편	47.9%	57.6%	48.5%	39.5%
매우 낮은 편	11.1%	3.0%	8.8%	20.9%

개성관광의 우선 재개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개성관광이라도 먼저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10명

중 8~9명(86.1%)은 지연되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여의치 않으면 개성관광이라도 먼저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금강산관광에 비해 관광객 규모도 적을 뿐 아니라, 현재 개성공단이 운영 중에 있어 개성관광 재개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현실적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개성관광 재개의 성과로 금강산관광 재개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적극적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성관광 우선 재개의 필요성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매우 필요하다	53.5%	21.2%	61.8%	65.1%
다소 필요하다	32.6%	42.4%	29.4%	30.2%
별로 필요 없다	11.8%	30.3%	7.4%	2.3%
전혀 필요 없다	2.1%	6.1%	1.5%	0.0%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전망

우선 남북 당국회담의 최우선 의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단된 남북경협 복원’ 등 경제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전문가들의 약 절반(46.5%)은 ‘중단된 남북경협 복원’(32.3%)을 비롯하여 ‘소규모 경협 제안’(7.6%)과 ‘대규모 경협 제안(6.6%) 등 경제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분야(27.8%)와 ‘사회문화’ 분야(25.1%)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 분야에서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현안(13.2%)과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8.0%) 등의 단기 현안을 주 의제로 지목했으며, 북핵 문제와 평화협정 등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15.3%)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4.9%)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은 경제 부문(54.6%)을, 보수 성향은 정치 부문(48.5%)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수

전문가 설문조사

성향은 정치(48.5%) - 경제(31.7%) - 사회문화(18.1%) - 기타(1.5%) 순으로 나타났고, 중도 성향은 경제(48.6%) - 사회문화(26.5%) - 정치(24.3%) - 기타(0.7%)의 순으로, 그리고 진보 성향은 경제(54.6%) - 사회문화(28.0%) - 정치(17.4%) - 기타(0.0%)으로 조사되었다.

남북 당국회담의 최우선 의제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중단된 남북경협 복원(금강산, 남북교역 등)	32.3%	22.7%	32.4%	39.5%
이산가족 상봉(명단 교환, 정례화 등)	15.3%	10.6%	14.7%	19.8%
정치 군사 현안(북한 도발, 남한 전단살포 등)	13.2%	21.2%	10.3%	11.6%
천안함·연평도 도발 문제(책임있는 조치 등)	8.0%	16.7%	6.6%	3.5%
소규모 경협 제안(지하자원 개발, 경공업 등)	7.6%	4.5%	9.6%	7.0%
대규모 경협 제안(SOC 확충 등)	6.6%	4.5%	6.6%	8.1%
북핵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등	6.6%	10.6%	7.4%	2.3%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4.9%	3.0%	5.9%	4.7%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확대	4.9%	4.5%	5.9%	3.5%
기타(북한 인권 문제 등)	0.7%	1.5%	0.7%	0.0%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10명중 9명(90.3%)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고 하였으며, '필요 없다' 는 응답은 한자리 수(9.7%)에 불과하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84.9%)이 진보 성향(83.7)에 비해 다소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2013. 2	2015. 4	2015. 11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매우 필요하다	56.2%	50.7%	55.6%	48.5%	64.7%	46.5%
다소 필요하다	39.0%	42.0%	34.7%	36.4%	32.4%	37.2%
별로 필요 없다	4.8%	5.8%	8.3%	12.1%	2.9%	14.0%
전혀 필요 없다	0.0%	1.4%	1.4%	3.0%	0.0%	2.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2013. 2., 2015. 4.

현 정부 임기 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비율(74.2%)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 ‘다소 낮은 편’(47.9%)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이에 못지않게 ‘다소 높은 편’(36.8%)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는 응답자도 다수 존재하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79.1%)가 보수(69.8)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매우 높은 편	4.2%	3.0%	4.4%	4.7%
다소 높은 편	21.5%	27.3%	22.1%	16.3%
다소 낮은 편	45.1%	45.5%	44.1%	46.5%
매우 낮은 편	21.5%	15.2%	23.5%	23.3%
불가능	7.6%	9.1%	5.9%	9.3%

끝으로 긍정적인 응답자 가운데, 만약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예상 시기를 ‘2016년 하반기’로 지목한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52.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2016년 총선 이전’(20.0%)과 ‘상반기 이내’(20.0%)로 나타나,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이 늦어도 내년에는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2007년 10.4 정상선언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되어, 늦어도 내년에는 개최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북정상회담 예상 시기	종합	성향별		
		보수	중도	진보
2015년 이내	2.5%	0.0%	0.0%	10.0%
2016년 총선(4.13) 이전	20.0%	18.2%	21.1%	20.0%
2016년 상반기 이내	20.0%	9.1%	26.3%	20.0%
2016년 하반기	52.5%	63.6%	52.6%	40.0%
2017년 상반기	5.0%	9.1%	0.0%	10.0%
2017년 하반기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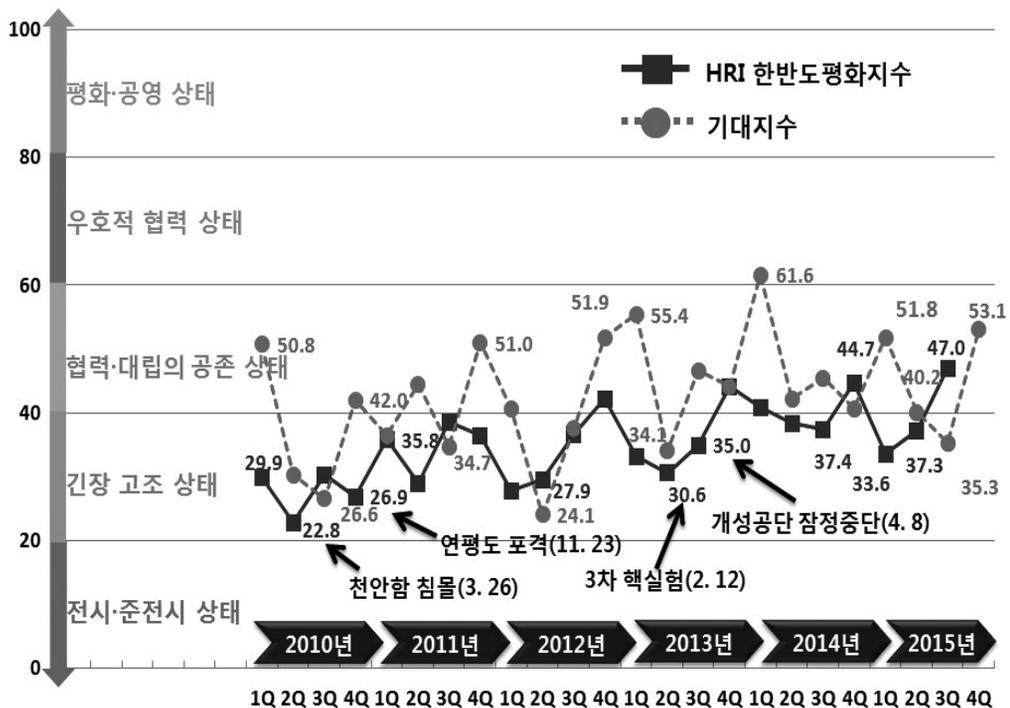
2015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결과와 시사점

종합 평가

2015년 3/4분기 실적지수 및 4/4분기 기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5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9.7p나 상승한 47.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진입하였다. 한반도 평화지수는 교류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의 급반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북한 실세 3인방 방문으로 일시 반등했던 2014년 4/4분기(44.7)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회복하였다.

한편 2015년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7.8p 상승한 53.1을 기록하여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전망은 3분기 만에 긍정적으로 전환하였다.

〈 2010~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기대지수 추이 〉



특징 분석 및 항목별·성향별 평가

평화지수는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와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로 나누어지는데, 3/4분기에는 주관적 지수와 객관적 지수가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주관적 지수 중에서도 기대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5년 3/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하락한 46.8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남북 교역과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 교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관적 지표인 3/4분기 전문가평가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는 모두 큰 폭 상승하였다. 전문가평가지수는 22.4p나 대폭 상승한 47.2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8.25 남북고위급 합의 도출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4/4분기 기대지수는 17.8p나 대폭 상승한 53.1을 기록해 2013년 4/4분기(61.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2010년 이후 최고치 기록하였다. 이는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 확대, 우려했던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의 도발 자제 등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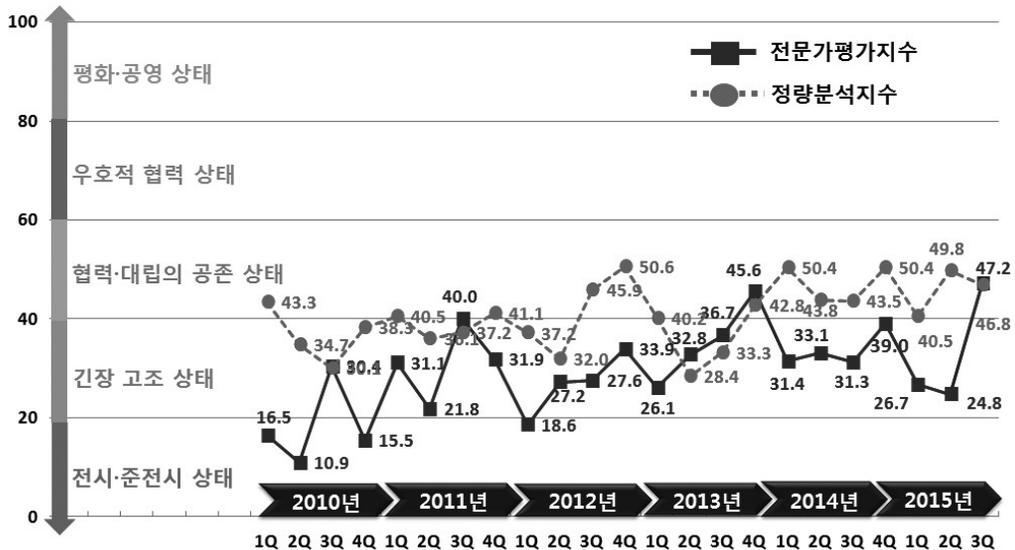
〈 2013~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 부문별 추이 〉

구 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5. 3분기			47.0 (▲9.7)	47.2 (▲22.4)		46.8 (▽3.0)
'15. 2분기	37.3 (▲3.7)	24.8 (▽1.9)	49.8 (▲9.3)	48.9 (▲3.2)	50.8 (▲15.4)	35.3 (▽4.9)
'15. 1분기	33.6 (▽11.1)	26.7 (▽12.3)	40.5 (▽9.9)	45.7 (▽1.2)	35.4 (▽18.5)	40.2 (▽11.6)
'14. 4분기	44.7 (▲7.3)	39.0 (▲7.7)	50.4 (▲6.8)	46.9 (▲0.3)	53.8 (▲13.1)	51.8 (▲11.1)
'14. 3분기	37.4 (▽1.0)	31.3 (▽1.8)	43.5 (▽0.3)	46.3 (▽0.5)	40.8 (0.0)	40.7 (▽4.8)
'14. 2분기	38.4 (▽2.4)	33.1 (▲1.7)	43.8 (▽6.6)	46.8 (▽5.5)	40.8 (▽7.7)	45.5 (▲3.2)
'14. 1분기	40.9 (▽3.3)	31.4 (▽14.2)	50.4 (▲7.6)	52.3 (▲5.2)	48.5 (▲10.0)	42.3 (▽19.3)
'13. 4분기	44.2 (▲9.2)	45.6 (▲8.9)	42.8 (▲9.5)	47.1 (▲0.6)	38.5 (▲18.5)	61.6 (▲17.5)
'13. 3분기	35.0 (▲4.4)	36.7 (▲3.9)	33.3 (▲4.8)	46.5 (▲16.6)	20.0 (▽6.9)	44.1 (▽2.6)
'13. 2분기	30.6 (▽2.6)	32.8 (▲6.7)	28.4 (▽11.8)	29.9 (▽3.6)	26.9 (▽20.0)	46.7 (▲12.6)
'13. 1분기	33.2 (▽9.1)	26.1 (▽7.8)	40.2 (▽10.4)	33.5 (▽14.6)	46.9 (▽6.2)	34.1 (▽21.3)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의 두 번째 특징은 8.25 남북고위급 합의 도출로 전문가평가지수는 큰 폭 상승했으나,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하락했다는 점이다. 전문가평가지수의 경우, 총 144명의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전 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22.4p나 상승한 47.2를 기록하면서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6.15 남북 공동행사 무산과 북한의 광주 U-대회 불참, 목함 지뢰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8.25 남북고위급 합의 도출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해소된 데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3/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3.0p 하락한 46.8을 기록했다. 이는 이벤트지수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교류지수가 6.2p 하락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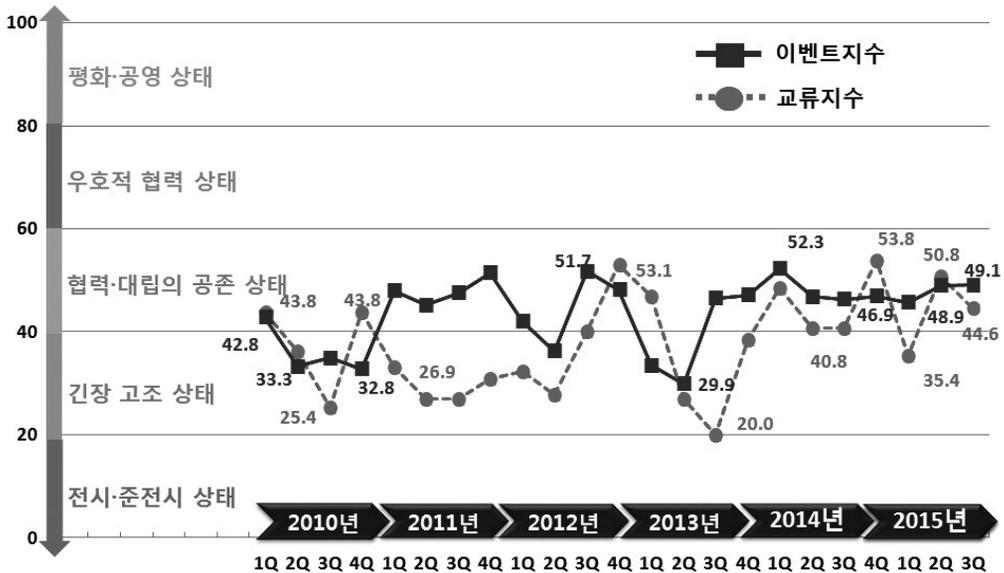
〈 2010~2015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한편 정량분석지수를 구성하는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다. 먼저 이벤트지수의 경우, 지난 분기 48.9에서 0.2p 소폭 상승한 49.1을 기록함으로써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3/4분기 내내 남한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무응답과 대남 비난, 목함 지뢰 사건 등으로 긴장 조성 국면이 지속되었

으나, 남북간 8.25 합의로 위기 국면이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교류지수는 지난 분기 50.8에서 44.6으로 하락하여 전기 대비 6.2p 하락하였다. 이는 남북교역과 개성공단 사업(2/4분기 대비 3.8% 감소), 경협 부문의 남북협력 기금 집행 실적(2/4분기 18.1억원 → 3/4분기 8.1억원), 그리고 방북 인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2010~2015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 추이 〉



2015년 3/4분기 평화지수의 마지막 특징으로, 전문가 성향별 특징을 살펴보면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 3/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모두 대폭 상승으로 급반전되었으며, 보수 성향의 전문가평가 지수가 소폭이나마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분기에 보수 성향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데 대한 반등과 함께,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8.25 합의에서 북한으로부터 '유감'이란 표현의 최초 합의문을 얻어냄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 원칙론이 유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4/4분기 기대지수는 17.8p 대폭 상승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문화 부문의 민간 교류 확대, 북한의 당 창건기념일 도발 자제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 2013~2015년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5. 3분기	52.1 (▲24.8)	55.5 (▲16.1)	48.4 (▲22.8)	54.6 (▲18.4)	46.1 (▲21.1)	48.7 (▲18.5)	47.2 (▲22.4)	53.1 (▲17.8)
'15. 2분기	27.3 (▽4.5)	39.4 (▽5.6)	25.6 (▽1.7)	36.2 (▽8.9)	25.0 (▲0.4)	30.2 (▽3.1)	24.8 (▽1.9)	35.3 (▽4.9)
'15. 1분기	31.8 (▽7.2)	45.0 (▽8.9)	27.3 (▽12.2)	43.2 (▽4.1)	24.6 (▽14.8)	33.3 (▽22.1)	26.7 (▽12.3)	40.2 (▽11.6)
14. 4분기	39.0 (▲2.4)	53.9 (▲7.7)	39.5 (▲5.2)	47.3 (▲5.2)	39.4 (▲15.0)	55.4 (▲20.0)	39.0 (▲7.7)	51.8 (▲11.1)
14. 3분기	36.6 (▲4.0)	46.2 (▲1.1)	34.3 (▽1.4)	42.1 (▽4.3)	24.4 (▽7.1)	33.4 (▽11.0)	31.3 (▽1.8)	40.7 (▽4.8)
14. 2분기	32.6 (▲1.5)	45.1 (▽0.9)	35.7 (▲4.6)	46.4 (▲3.4)	31.5 (▲5.2)	44.4 (▲3.2)	33.1 (▲1.7)	45.5 (▲3.2)
14. 1분기	31.1 (▽10.8)	46.0 (▽12.2)	31.1 (▽14.9)	43.0 (▽20.1)	26.3 (▽21.2)	41.2 (▽21.4)	31.4 (▽14.2)	42.3 (▽19.3)
'13. 4분기	41.9 (▲6.9)	58.2 (▲16.7)	46.0 (▲6.5)	63.1 (▲15.9)	47.5 (▲12.4)	62.6 (▲20.1)	45.6 (▲8.9)	61.6 (▲17.5)
'13. 3분기	35.0 (▲3.0)	41.5 (▽8.4)	39.5 (▲2.4)	47.2 (▲1.3)	35.1 (▲7.0)	42.5 (▽1.8)	36.7 (▲3.9)	44.1 (▽2.6)
'13. 2분기	32.0 (▲4.9)	49.9 (▲16.2)	37.1 (▲11.8)	45.9 (▲12.4)	28.1 (▲3.6)	44.3 (▲9.0)	32.8 (▲6.7)	46.7 (▲12.6)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4.1 (▽21.3)

시사점

남북 차관급회담의 개최로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만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산가족 상봉은 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생애 시한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보다 전향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와 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10명중 8명 이상이 ‘先 재개’ 혹은 ‘3대 선결과제만 해결되면 재개’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96.5%)가 금강산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보탬이 된다고 응답한 만큼, ‘관광 재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단기간 내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우면, 교통편이나 기후적 여건이 양호한 개성관광이라도 먼저 재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이후난(先易後難)과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으로, 남북 당국회담에서는 성과 도출이 쉬운 부문부터 우선 의제로 논의한 후,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당국회담에서 중단된 남북경협 복원과 소규모 남북경협 제언 등 경제 현안을 최우선 의제로 다루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등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룰 것을 주문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타결 가능성이 높은 이들 의제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한 후,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북한을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과 마이너스 성장’ 경제가 아니며 남북교역을 포함해 1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시장화 진전과 경제특구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 지정 등을 통한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한에게도 과거의 단순 지원 보다는 경협 파트너로서 대규모 남북경협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변화 유도의 접근 방식도 ‘지원’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정책 집행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 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개혁·개방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統**